

4.16 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건언하라,
우리를!

2015년 11월 28일 토요일 13시
수운회관

목차

여는 말	4
4.16 인권선언문 초안	7
토론 프로그램 매뉴얼	11
4.16 인권선언 운동 추진 계획	20
* 참고자료	
1. 풀뿌리토론 현황	30
2. 풀뿌리토론 결과 기초분석 보고서	33
3. 4.16연대 소개	52

2차 전체회의 프로그램

“선언하라, 우리들!”

12:30~13:30 - 등록

13:30~14:00 - 개회 - 목상 및 '여는 말'과 '내딛는 말'

14:00~15:30 - 4.16인권선언문 초안발제 및 모둠토론

15:30~15:45 - 휴식 (15분)

15:45~16:45 - 4.16인권선언운동 추진계획 모둠토론

16:45~17:00 - 선언문 낭독

17:00~ 폐회

여는 말



홍영미_4.16가족협의회, 재욱 엄마



여는 말

홍영미(4.16가족협의회, 재육 엄마)

2014년 4월 16일 그날 이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봄이 두려워지는 겨울의 코앞이군요. 그래도 뚜렷이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언제나 가족들 곁에 함께 하는 여러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날을 벗어나지 못하고 참사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다 밑 세월호에 아직 수습되지 못한 아홉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한 번 불러볼까요? 고창석, 권재근, 권혁규, 남윤철, 박영인, 양승진, 이영숙, 조은화, 허다운. 세월호가 인양될 때까지 기다림을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를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작년 특별법이 제정될 때, 올해 시행령이 통과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힘 모아 만들어낸 특별조사위원회가 휴지조각이 되게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12월에 열린다는 청문회에서 구조 실패의 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당 추천 위원들에게 지침을 내리는 해양수산부 문건이 발각되었지요. 사퇴도 불사하고 대통령의 7시간 조사하기를 막으라고요? 충격적입니다. 작년 국정조사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올해가 되니 아예 기록이 없다 하고,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니 특별조사위원회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어 그러는 것일까요?

진실조차 숨기는 데만 급급하니 안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안타까운 죽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기업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확립했다면, 참

사 이전에 풀어온 안전 규제를 다시 조였다면, 없었을 일들 말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이 더욱 소중한입니다. 지난 7월 이 자리에 함께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을 열겠다고 한목소리로 결의문을 낭독하던 시간도 떠오릅니다. 사실 그때는 풀뿌리토론이 얼마나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몰랐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석 달 동안 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풀뿌리토론에 참여해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드는 오늘의 자리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선언하고 서명하고 나서 내가 무슨 선언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4.16 인권선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인 만큼 이 선언의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하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해주십시오. 완벽한 선언문 한 장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 아닙니다. 조금 허술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가슴에 담은 선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슴으로 만나주십시오. 널리 알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선언할 수 있도록 모아주십시오. 4.16인권선언이 우리가 손 잡고 발 맞추어 나가는 약속의 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훗날 역사는 말할 겁니다. 2015년 11월28일 그날 민초들은 이렇게 역사를 썼다고.

감사합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초안)

4.16 인권선언 제정특별위원회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애도와 저항을 억누르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동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목 놓아 울었다. 때로는 홀로 광장에 섰고, 때로는 몸을 던져 함께 길을 걸었으며, 때로는 밤을 새워 토론했고, 때로는 곡기를 끊었다.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의 모독에 흔들리지 않았고, 불의를 감추고 정의를 짓밟는 정권의 박해를 견뎠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싸우면서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 권리를 위한 실천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겠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 싸움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다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2.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받아서 는 안 된다.
3. (연대와 협력)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5.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6. (진실의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7.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의 해결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평등하게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치유와 회복은 재난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당한 공동체를 포괄해야 한다.

10.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

11.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12.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다.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할 시간이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연대하며 협력하겠다. 이제 손을 잡자. 이제 행동하자.

토론 프로그램 매뉴얼



1.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3. 이런 점을 미리 고려하세요.

1. 이런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각자의 지역, 공동체 등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느꼈던 억울함, 분노, 슬픔 등의 기억을 나누고 우리가 침해 당한 권리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현재까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취합된 토론 기록만 80여 건,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사람 수는 1,100여명이며 이를 통해 857개의 권리가 제안되었습니다. 아직 취합되지 않은 토론 결과와 12월에 잡혀있는 토론 등을 고려하면 100회 이상의 풀뿌리토론, 1천 개 이상의 권리가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4.16 인권선언 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풀뿌리토론의 결과를 모으고 정리하여 <4.16 인권선언> 성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선언문에는 풀뿌리 토론에서 모아진 고민과 목소리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성안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선언문이 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 풀뿌리토론의 결과가 모아진 선언문을 함께 읽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 ☞ 선언문에 담긴 권리들을 한번 더 고민해보고, 지금의 세월호 참사,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 ☞ 선언문이 글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실천을 함께 약속합니다.

2.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토론 질문

1) 당신에게 '가까운 문장'과 '먼 문장'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씩 뽑아주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눠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던 문장, 풀뿌리토론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내가 썼어도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 문장을 하나 골라주세요. 왜 가깝게 느껴지는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더불어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수궁이 가지 않는 문장, 읽다가 말문이 막히는 문장, 의견이 다른 문장을 하나 골라주세요. 왜 멀게 느껴지는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2) <4.16 인권선언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선언인단에 함께해줄 것을 제안한다면, 어떤 문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 같나요? 나만의 해설 문장을 만들어주세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 하나, 세월호로 국한되지 않는 것 하나를 뽑아주고 설명을 덧붙여주세요.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권리를 가진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뭔가를 물으면 '넌 몰라도 돼'라고 자주 답해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가만히 있다는 방송이 반복되는 걸 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요. 충분히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들잖아요. /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 돈보다 생명, 인간을 존중한다고 여기는 곳이 있을까 싶어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우선시한다는 기본을 늘 기억하면서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따져볼 때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3)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다른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선언한 우리! 선언문을 글자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자신의 실천 약속, 함께하는 실천 약속을 나누어요.

예시) 4.16 인권선언문 주변 사람 3명과 함께 읽기, 그동안 지역에서 세월호 서명운동 함께하다가 뜸해진 사람들에게 한번 더 연락해보기 등

질문 해제

1. 당신에게 '가까운 문장'과 '먼 문장'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씩 뽑아주시고 그 이유를 함께 나눠봐요.

이 질문은 <4.16 인권선언>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4.16인권선언>이 토론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선언문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4.16 인권선언 운동은 전문가들의 글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토론과 참여를 통해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1천여 개의 권리가 모였고, 선언문은 그 결과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언문을 직접 듣고, 발제를 나눈 후 든 생각이나 감정, 소감을 나눠주세요. 어려움, 간단함, 좋음, 복잡함 등 내가 느낀 점과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참여자들과 이야기 나눠요. 더불어 <4.16 인권선언>에서 가깝게 느껴지는 문장, 멀게 느껴지는 문장을 하나씩 뽑아보고 왜 가깝거나 멀게 느껴지는지 함께 나눠요. 가깝게 느껴지는 문장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던 문장, 풀뿌리토론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내가 썼어도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 문장을 하나 골라주세요. 먼 문장에는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수궁이 가지 않는 문장, 읽다가 말문이 막히는 문장, 의견이 다른 문장을 하나 골라주세요.

예시)

☞ 가까운 문장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내가 참여했던 풀뿌리토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였다. 세월호 참사가 결국 이윤만을 위해 작동한 사회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참사 이후에도 인간에 대한 존중보다 돈이 먼저였다. 이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내가 가장 절실히 느꼈던 문제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꼭 지켜져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대를 IS에 비유하고 국회에서 복면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절실히 느끼는 권리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일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어있다.

☞ 먼 문장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 옳고 좋은 말들이 모여져있는 것 같긴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추상적으로 느껴진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 구조하는 데 어떤 차별도 없는 게 옳은걸까 고민이 된다.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은 먼저 구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

2. <4.16 인권선언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선언인단에 함께해줄 것을 제안한다면, 어떤 문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 같나요? 나만의 해설 문장을 만들 어주세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 하나, 세월호로 국한되지 않는 것 하나를 뽑아주고 설명을 덧붙여주세요.

이 질문은 여전히 보장되고 있는 않은 권리들을 되짚고, 세월호 참사에서 빼앗긴 권리들이 세월호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왜 필요한지 나누기 위한 질문입니다. 더불어 <4.16 인권선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명하기 위한 우리들의 말을 모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내가 겪은 세월호 참사, 그리고 변화해야 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인권선언문과 연결시켜봐요. 이를 위해 권리 항목 전체, 혹은 한 문장, 한 단어에 나의 말글로 해석을 달아봅시다. 가능하면 세월호와 관련된 내용 하나, 세월호에 국한되지 않는 내용 하나를 써주세요.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빼앗겼다고 생각한 권리가 우리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세월호 참사에서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은 무엇인지 되짚어봅시다.

예시)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이기에, 동물조차도, 의례가 필요하다. 애도조차도 죄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많다. 한국전쟁이나 독재정권 아래에서의 의문사. 우리 사회는 과연 충분히 애도해왔나? 각종 재난 참사로 희생된 분들에게도. 빨리 잊으라는 강요에 시달려왔던 것 같다.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법제도와 문화가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하고 싶은 말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을 안하게 되기도 한다. 그럴수록 성폭력 문제 해결은 어려워진다.
- 장애인들이 싸울 때에도 '착한 장애인' '순수한 장애인'을 강요받는다. '순수한 유족'을 강요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쁜 장애인 되기' 같은 기획도 있었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 세월호에 탔던 사람들 중 그 배의 위험을 알았던 사람이 거의 없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선원들조차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사고 직후 배에 탄 사람들 중 위험을 제대로 공유 받은 사람도 없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어야했고, 피할 권리도 침해당했다.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권리를 가진다"

-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뭔가를 물으면 '넌 몰라도 돼'라고 자주 답한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반복되는 걸 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충분히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든거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 돈보다 생명, 인간을 존중한다고 여기는 곳이 있을까 싶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우선시한다는 기본을 늘 기억하면서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따져볼 때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이다.

3.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다른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선언한 우리! 선언문을 글자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자신의 실천 약속, 함께하는 실천 약속을 나누어요.

<4.16 인권선언>은 선언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이어질 세월호 투쟁과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인권선언문을 널리 알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읽고, 이 내용들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약속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모두 사람들과 약속을 나누면서,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모두의 약속으로 정해봅시다. '선언인단을 모으겠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읽겠다'는 막연한 내용보다는 언제까지, 누구와, 어떤 행동을 함께할지 약속해봐요.

예시)

"4.16 인권선언문 피켓 선전전"

- 인권선언문의 내용들 중 주변 이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문구를 피켓에 써서 사람들과 함께 선전전을 진행하겠다. 내년 1월까지 최소 3명의 사람들과 3회의 선전전을 약속한다.

"인권선언문을 3명과 나누고 함께 토론, 선언인단으로 조직하기"

- 선언문을 SNS만 올리고 서명 받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인에게 인권선언 운동의 취지와 경과 등을 설명하고 선언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다.

"그동안 지역에서 세월호 서명운동 함께하다가 뜬해진 사람들에게 한번 더 연락해보기"

- 참사 600일이 다가온다. 지역에서 같이 서명운동 받던 분들 중 몇 분은 연락이 뜬해지고 얼굴보기도 어려워졌다. 이번 기회에 이 분들께 한번 더 연락해보고 같이 하자고 손 내밀어 보겠다.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한달에 한번씩 연대 실천하기"

- 4.16 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세월호에 국한된 게 아니다. 우리 사회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세월호 외의 다른 사안에도 관심 갖고 작은 연대라도 실천해 보겠다.

3. 이런 점을 미리 고려하세요

토론 참여자들이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토론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쓰고 기억해주세요.

- ☞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토론 중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 바랍니다.
- ☞ 여기는 평등한 토론의 원탁입니다. 둘러앉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알지 못하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모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편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나눠요.
- ☞ 토론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고루 들을 수 있도록 너무 자주 또는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분이 없도록 합니다.
- ☞ 토론에 참여하는 다른 이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 혹시 같이 이야기 하는 사람 중,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덜 주의해서 듣고 있지는 않나요? 모두의 이야기를 차별없이 귀기울여 들어요.
- ☞ 얘기 도중 성소수자나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남'으로 여기는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를 배제하는 표현은 삼가주세요.

4.16 인권선언 추진 계획



4.16 운동의 현재와 인권선언 운동
이후 계획을 함께 논의합니다

4.16운동의 현재

1) 미수습자를 가족 품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시신유실방지대책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4.16 연대는 수습인양위원회에 함께 할 시민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그동안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팽목항으로 가는 기다림의 버스가 운영되어왔으나 더 폭넓은 참여가 가능한 활동을 모색 중이다. 11월과 12월에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팽목항 행 기다림 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12월 11일 저녁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미수습 가족들과 함께 기다리는 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광화문에서 ‘미수습자를 기다리는 금요 낭독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양 관련 소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가족들은 동거차도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가족들이 세월호 인양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면서 독자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11월 말 선체 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2) 진실을 밝히는 운동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부의 진실규명 방해 행위를 폭로하고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진실을 밝히는 대중행동의 일환으로 시민토론회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10월 15일에는 “구할 수 있었다”는 주제로 구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했으며, 10월 29일에는 ‘4.16 세월호 특별법 제정 1년, 중간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진상규명 예산을 91% 삭감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로 활동기간을 축소하려고 한다. 최근 해수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에 대해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 특조위는 정부의 방해로 11월 23일 ‘대통령의 행적조사’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예산과 일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12월 14일~16일 첫 번째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경의 구조 실패’를 중심적인 주제로 다룬다. 세월호 침몰 자체의 의혹도 크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구조에 실패했고, 그 이후 이 책임이 어떻게 말단에게만 지워졌는지 등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3) 안전사회를 만드는 운동

4.16연대가 세월호 특별법 이후 첫번째로 낸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큰 사고로 수 많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제기를 해보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안전사회위원회’ 산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가 만들어졌고, 최근 [4.16 이후는 달라야 한다라는 주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소책자를 발간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 외에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영국과 호주 노조의 대표를 초청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최근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청주 화장품 업체에서는 지게차 노동자가 큰 부상을 입었으나 산재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구급차를 돌려보내서 결국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는 스크린도어를 고치려다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하여 생명의 존엄을 알리고 대중적으로 생명 존엄의 훼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

4) 기억하기

11월 현재까지 교실존치문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교실이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대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세월호참사에서 숨진 기간제교사도 마찬가지이다. 인사혁신처는 아직도 제대로 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있다.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20만 명의 서명은 교육부로 전달하고, 이후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기획을 낼 예정이다.

영화 [나쁜나라]가 곧 개봉된다. 12월 3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의 상영관을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광범위한 배급위원회를 모집할 예정이고, 개봉과 함께 공동체 상영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전교조와 협의하여 청소년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모금과 상영회를 조직하려고 한다.

5) 탄압에 저항하기

올해 세월호참사 1주기 싸움으로 인해서 약식기소되거나 체포되어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이들이 매우 많다. 도로교통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다양한 죄목이지만 결국은 연대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최근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의 과도한 진압과 이후 마구잡이 압수수색과 소환장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

4.16연대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노란리본법률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탄압에 대한 저항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지 않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탄압을 당하는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법정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조만간 대표자총회 및 발족식을 하고, 후원주점 등을 통해서 법률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6) 모두가 4.16 연대와 함께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특조위의 활동은 계속 정부 여당이 방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긴 호흡을 갖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오랜 길을 가려면 함께 모이는 조직이 필요하다. 4.16연대가 바로 그런 조직이다. 그러므로 더 많은 이들이 4.16연대 회원이 되어 함께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 분들에게 4.16연대 회원들의 각 지역별 소모임을 구성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회원 간 소통만이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지역에서 4.16연대와 함께 활동할 수도 있지만, 광화문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모으는 분들이 있다. 진실마중대와 천막카페, 노란리본공작소 분들이 광화문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촛불문화제도 진행된다. 광화문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더 이상 4.16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인권선언’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우리가 느꼈던 추상적인 미안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고, 재난과 참사의 고통으로 가득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이다. 더 많은 이들이 4.16인권선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하자.

2. 2차 전체회의 이후 4.16인권선언운동의 기초

1) 풀뿌리토론으로 함께 만든 4.16인권선언을 더욱 널리 알리고 함께 선언할 사람들을 모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익히고 인용하고 활용할 때 4.16인권선언은 살아있는 선언이 된다. 우리가 선언한 권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널리 선언인을 조직하자.

2) 4.16인권선언이 현실의 변화를 피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특히 2주기까지 힘을 모아가는 기획을 4.16운동과 유기적으로 만들어간다. 세월호 참사의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권리 주체들의 힘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행동의 약속보다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을 만들고 행동을 제안하자.

3) 더욱 많은 사람들이 4.16인권선언에 담긴 권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 4.16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정의 출발이기도 하다. 권리의 내용을 풍부하게 이해할수록 이 사회가 양산하는 수많은 구조적 문제들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연대도 단단해질 수 있다.

3. 2차 전체회의 이후 4.16인권선언운동

세월호 참사 과제 해결, 참사 없는 사회 만들기
행동의 약속을 모으고 나누자!

나/우리 _____ 는
4.16인권선언에 함께 하며 _____ 을
약속합니다!

- ☞ 4.16인권선언 추진단을 선언인단으로 전환
- ☞ 2주기까지 선언인운동을 벌이며 4.16운동의 밑불을 확산

4. 4.16인권선언 선언인단 조직

1) 4.16인권선언 선언인단

선언문 발표 후, 이름/약속/이메일주소 등을 적는 선언인운동 시작
선언의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나 모임일 수도 있다.

4.16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약속을 모아 서로 나누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약속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을 담도록 독려해, 2주기까지 가는 흐름의 밑불을 확산시키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 또한 4.16인권선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 더욱 폭넓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예시)

- 12월 중으로 12명을 모아 4.16인권선언을 함께 읽고 전파할 것을 약속합니다!
- 우리 동네 버스정류장 세 곳에 4.16인권선언 포스터를 붙일 것을 약속합니다!

- 4.16인권선언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4.16연대 회원으로 가입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해온 “넌 몰라도 돼!”를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단체 페이스북 계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을 올릴 것을 약속합니다!

2) 흐름

2014년 12월부터 선언인단 조직 시작

2015년 3월 선언인 집중행동

2주기 즈음 4.16인권선언 선언대회 개최

그 후 4.16인권선언은 4.16운동의 기초로, 융합된 운동으로 전개

3) 선언인단 조직을 위한 활동

지역이나 부문, 모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선언인을 조직할 수 있도록 기획 제공

- 인증샷 릴레이 : 자신의 약속을 적어 사진을 찍고 다음 선언인 지목하며 릴레이로 이어가기
- 내 마음을 흔든 선언 : 4.16인권선언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 소개하면서 선언인을 조직하기
-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하는 약속의 간담회 : 4.16인권선언의 내용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과제를 다시 확인하고 함께 하는 행동을 약속하는 자리
- 서명, 모금, 신문광고 내기 등 다양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안
- 1차 풀뿌리토론을 진행하지 못한 곳에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분야별/모임별 선언문 쓰기 등이 이루어지면 백서 발간 (아래 예시)

예시) 416 인권선언 (2015년 9월 13일 화정교회 청소년부 제안) - 전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추구할 권리 또한 선천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1960년대에 비해 오늘날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배워왔습니다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겁한 권력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모습으로 얼룩진 사회를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날 당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안전할 권리가 있었으나, 이기적인 조종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켜지지 못하였습니다. 참사이후 보호받아야 할 유가족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 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서의 경찰의 행동은 본연의 의무와는 정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일부 다가운 시선, 그리고 여러 의혹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 더해져 답답함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을 폭행, 강제연행, 과잉진압, 그리고 실제용도와 목적을 잃은 캵사이신과 물대포의 무차별 살포 등, 같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국군 지휘 및 통솔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은 7시간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골든타임이라고 여겨지는 시간 동안에도 수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책임하게 처신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극적인 방관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권을 되찾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화정교회 청소년부는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2조 모든 사람은 세월호 사건에 관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3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세월호 관련 집회도 마찬가지이다.

4조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세월호 사건을 모독하는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5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세월호 유가족 역시 사회의 일원이며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5. 4.16인권선언 알리고 채워가기

1) 304개의 약속 모으기 릴레이 인증샷 (#4.16인권선언)

12월 6일(참사 600일)까지,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며 304개의 약속 모으기 이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 지속

2) 기자회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언에서 행동으로>

12월 10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광장
4.16인권선언 발표 및 선언인운동 제안

3) 4.16인권선언 알리고 채우기

해설책자 제작 / 포스터, 만화,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로 제작 추진 / 학술대회 개최 / 강의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획 모색

12월 3일(목) 오후 3시, 인권중심 사람에서 <청소년과 세월호> 토론회 개최. 청소년이 보는 세월호 참사, 대형참사를 겪은 10대의 경험과 삶,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의 변화 평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인권이 필요한 이유 등 발제와 지정토론 후 전체토론 이후 청소년과 함께 하는 기획을 모색 중인 단위들과 소통하며 협력

<청소년과 세월호> 토론회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어른의 미안함'을 넘어서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 인권중심 사람



청소년 활동가가 보는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에서 그려졌던 청소년

발제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지정토론자 변 교육공동체 나다

대형참사를 겪은 10대의 경험과 삶

발제 이호연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
지정토론자 박성현 안산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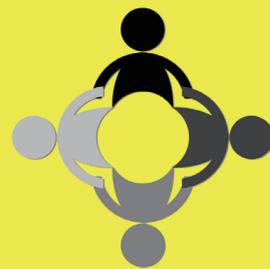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의 변화와 방향성 평가

발제 조영선 교사, 전교조 학생인권국장
지정토론자 이누리 무지개빛 창개구리, 중학교 3학년 학생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 인권이 필요한 이유

발제 미류 4.16연대 인권선언 제정특위
지정토론자 오지숙 4.16연대 공감위원회
김진근 YMCA연맹 지도력개발국장

참가자들과 전체 토론



존엄과 안전에 관한



문의 010-9236-0367 혜원

02-2285-0416 4.16연대

www.416act.net

참고 자료

1. 풀뿌리토론 현황
2. 풀뿌리토론 결과 기초분석 보고서
3. 4.16연대 위원회별 활동 소개

1. 풀뿌리토론 현황

4.16인권선언 제정특위에 알려진 풀뿌리토론장은 총 71개로, 집계되지 않은 토론장까지 합하면 100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71개의 토론장에 참여한 인원은 약 1,100여명이며 그 중 집계된 권리 개수는 857개이다.

1차 전체회의를 위한 풀뿌리토론 워크숍 (6.20)

1차 추진단 전체회의 (7.11)

4.16마포모임 (9.16)

4.16성북연대 (10.20)

4.16인권선언 빈민원탁회의 (10.14)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 in은평 (9.30)

개인 공동체 (9.20)

경기엄마모임 (8.23)

경남진주지역 모임 (10.14)

고양시 동넙교회 (9.20)

고양파주 추진단 모임 (9.3)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 (9.7)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모임 (8.26)

국제민주연대 (9.16)
국제엠네스티 라이프 바다위 캠페인 참석자 등 (9.12)
나우학교 (9.23)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서울모임 (10.8)
노란책갈피_서울대 학생들의 세월호 책자만드는 모임
노원 416약속지킴이 노원공동행동 (9.11)
녹색당 고려대모임 (9.15)
대학생 풀뿌리 토론 워크숍 (9.9)
무지개행동 (11.24)
민들레읽기모임 (10.27)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생 모임 (9.8 / 9.13)
보건의료학생'매듭' (9.20)
부산청년공동체 파도 (9.23)
불안정노동철폐운동연대 (9.16)
빈곤사회연대_홈리스행동 회원 (10.8)
빈곤사회연대_황학동 노점상 회원 (10.2)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9.12)
서대문416네트워크 촉진자 모임 (7.2)
서대문416네트워크 (7.26)
서울 어린이도서연구회 (9.23)
서울대 윤리교육과 '하나반' (10.30)
세월호 부천대책위 (10.16)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 모임 (8.6)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하인 모임 (10.12)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 (10.6)
수요일 책읽기 모임 (9.30)
수원시민공동행동 (9.5)
수원여성회 권선분과 (9.21)
수원여성회 장안팔달구 분과모임 (9.14)
수원지역 풀뿌리 토론 (8.13)

수원 칠보산 풋볼 (9.23)
수원 희망샘 도서관 (9.3)
신정동 성당 사회교리모임 (8.21)
안산 화정감리교회 청소년부 (7.19)
안산부곡풋볼
엄마의 노란 손수건 (8.8)
용인지역 풀뿌리 토론회 (9.11)
이우고등학교 동아리 (8.8)
인권교육센터 '들' (10.12)
인권선언 민변 토론회 (8.26)
인권운동사랑방 (10.24)
일리치모임 (8.8)
장애여성공감 (10.28)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0.29)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 (9.24)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 참가자 (9.30)
제천간디학교 (10.29)
중학생과 함께한 풀뿌리 토론 (7.17)
진보네트워크센터 (9.12)
천도교한울연대 (10.10)
청춘의 지성_대학생 동아리 사월애 (8.11)
충남아산 인권여행 (10.23)
충북 촉진자 모임 (9.22)
충북지역 모임 (10.13)
평화바람 (9.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6.17)
현대정치철학연구회 (10.1)
홍사단민족통일 운동본부

2. 풀뿌리토론 결과 기초분석 보고서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18 작성)

1. 개괄

1) 풀뿌리토론 현황 (11월 5일 기준)

7월 11일 ‘4.16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 이후 다양한 모임에서 풀뿌리토론이 진행되었다. 풀뿌리토론의 기본 정보나 결과는 4.16인권선언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풀뿌리토론이 열렸으나 기록이 취합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으며 토론이 열린 후 뒤늦게야 파악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보면, 풀뿌리토론은 68회 열렸으며 토론의 단위(5~10명 가량으로 구성된 모둠)를 기준으로 보면 110건 이상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9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풀뿌리토론이 열린 지역은 해외까지 포함하여 다양하다. 다만 풀뿌리토론이 아예 열리지 않은 지역도 있어 고루 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집단은 매우 다양하다. 중학생, 고등학생, 홈리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생, 장애인, 교회, 학교, 시민모임, 도서관 인문학 교실 등 다채로운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냈다. 기존의 사회단체들보다 자발적인 시민모임에서 열린 토론이 훨씬 많다.

2) 풀뿌리토론 결과 모음 및 기초 분석

풀뿌리토론 결과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있다. 토론의 분위기를 살필 수 있지만 제안된 권리들의 분포나 경향을 살피기 어려운 점이 있어, 3번 질문(권리 제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로 모았다. 11월 3일까지 취합된 733건의 권리 제안과 설명을 살펴보면서 분석을 진행했다. 기초 분석은 제안된 권리들의 내용을 살피며 유사하거나 연결되는 것들을 묶는 분류 작업을 통해 진행했다.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선언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을 찾는 동시에 제안된 권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쟁점을 찾고 여러 권리들 간의 연결점들을 짚어보면서 풀뿌리토론의 의의를 짚어보는 토론도 진행했다.

제안된 권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해당 권리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살피며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을 하며 세 차례에 걸쳐 재분류 작업을 진행했다. 기초 분석은 풀뿌리토론 참여자들 전체의 의견을 모은 내용으로 4.16인권선언문 성안의 기초자료이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선언문에 담을지는 별도의 성안 토론이 필요하다.

3) 기초 분석 내용의 개요

풀뿌리토론 참여자들이 제안한 권리들은 아래와 같이 나뉘볼 수 있다.

기초 ; 특정 권리를 제안했다기보다는 인권선언의 기초로서 지향해야 할 가치나 방향을 담은 포괄적인 내용들이다. 인권선언 전체를 관통하는 성격의 내용들로 여기에 모인 권리들은, 존중/평등/연대/안전으로 다시 분류해 볼 수 있다.

공감 ; 감정을 존중받고 타인과 공감하는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기초의 성격을 띤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초'로 분류된 내용이 원칙이나 철학에 가까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공감의 경우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주장된 측면이 강해 따로 묶었다.

피해자 ; 권리주체로서의 피해자에 주목하여 제안된 내용들이다. 다른 권리들과 내용이 연결되고 유사하더라도 권리주체로 피해자가 강조된 내용이 많아 따로 분류했다. 모인 권리들은

크게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과 피해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구체적 권리들을 제안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진실과 정의 ; 진실에 대한 권리를 다룬 내용들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가 큰 문제로 남아있는 만큼 제안된 권리의 내용들은 선명하고 응집력이 있다. 진실과 관련해 언론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 중분류로 언론을 따로 두었고, 책임과 처벌에 관한 내용들 역시 따로 묶었다.

표현과 행동 ;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로 모았다. 추모나 애도할 권리 등을 특정해 제안된 내용들이 많아 애도에 관한 권리를 중분류로 따로 묶었다. 모여서 함께 행동할 권리로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제안이 많았으나 집회시위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한 제안들을 묶었다. 한편, 혐오와 관련된 권리 제안들이 주로 표현의 자유와 연관지어 설명되어 여기에 중분류로 두었다.

안전 ; 인권선언의 기초로서 가치를 제안한 것과 다르게 안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권리로 제안된 내용들이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개인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권리, 작업중지권 등 위험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권리, 전 사회적으로 위험을 줄이고 위험을 공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권리다.

민주주의 ; 그 외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들이 상당수 제안되어 모았다. 그러나 다른 분류에 비해 중분류의 내용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편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 불복종의 권리, 주권자로서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 체제의 상에 대한 희망을 담은 내용으로 구분된다.

2. 기초

1) 존중

인간의 존엄, 기본적인 존중을 강조한 내용을 모았다. 참사 이후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는 기본부터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임을 짚은 내용들이다.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등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 등 기본적/인도적 처우에 관한 내용,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나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 등 포괄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특이할 만한 점은, “죽은 이후에도 인간이다” 등 죽은 사람에게도 기본적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점이다.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시신이 땅바닥에 그냥 방치되는 등 수습 과정에서 시신이 함부로 다뤄진 사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를 찾아서 가족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그것이다. 죽은 이후에 어떻게 대하는지는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반영한다. 특히 재난이나 참사에 관한 권리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겠다.

2) 평등

모두 동등하게, 누구나 차별 없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제안들을 모았다. 평등을 해치는 현실로, ‘가진 자의 권리만 있는 세상’ ‘청소년들이 받는 대접이 그 모양’ 등이 지적되었으며, 피부색, 성적 지향, 나이 등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들이 언급되었다. 참사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나,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안 되고 있는 현실처럼 삶의 차별이 죽음의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 등이 조명되었다.

특히 청소년이 평등하게 권리 주체로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나이 어리다고 무시 받지 않을 권리, 아이들이 공부 못해도 될 권리, 청소년의 투표권 등의 제안이 있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말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제안된 권리들이 있으나 권리 내용이 분명할 경우에는 구체적 권리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3) 연대

연대할 권리, 더불어 살아갈 권리 등의 제안들을 모았다. 다양한 제안들을 모아보면 ‘연대’를 권리로 접근하는 시선들이 확인된다. 공감과 성찰로부터, 우리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이가 연대의 힘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또한 ‘이타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제안도 있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돕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라는 내용이다.

풀뿌리토론 참여자들은 누구나 서로 기대며 살 수밖에 없다는 조건을 통해, 또한 억압 받는 사람들이나 약자들일수록 함께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통해, 연대를 권리로 제안하였다. 한 참여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함께 하면서 어느 순간 연대를 의무이기보다 권리로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른 질문(“왜 나의 연대할 권리를 막는가, 연대를 못하게 하는가.”)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주기도 했다.

4) 안전

생명을 돈이나 숫자로 환원해선 안 된다, 이윤보다 생명과 삶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들을 모았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들의 ‘살 권리’를 침범한 것으로 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 안전을 요구할 권리 등의 제안이 이어졌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들도 많았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 모두가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해졌으며 안전이 개별적으로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권리라는 인식도 확인되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안전을 권리로 말하려니 너무나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라 인권교육 하기가 오히려 미안하더라는 이야기를 남긴 참여자도 있었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는 죽지 않을 권리에 한정되지 않았다.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등 생명과 안전을 삶의 연속적 권리로 연결해가며 확장하는 제안들도 있었다. 한편, 정부가 말하는 안전이 우리가 말하는 안전인지 물어야 한다며 ‘안전’이라는 가치에 대한 고민도 제기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혁신마스터플랜’ 등의 후속 조

치를 취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각종 규제완화가 계속 추진되는 현실에서 ‘안전’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할 듯하다.

3. 공감

‘슬퍼할 권리’ ‘위로할 권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고 나누는 것에 권리의 이름을 붙인 제안들이 많았다. 참사 이후 저마다 느끼는 감정조차도 자유롭게 드러내고 나누기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한 듯하다. 감정은 타인과의 유대를 확인하는 직접적인 매개라는 점에서, 참사로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섬세하게 살펴야 할 것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존중받을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다수는 슬픔의 감정을 말했지만 ‘슬퍼하라’는 강요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감정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슬픔의 주인이 될 권리 등 각자의 감정을 각자의 방식으로 느끼고 드러낼 수 있도록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감정과 관련해 제안된 권리들을 모아보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자신의 경험으로 세월호 참사를 겪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타인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울거나 화낼 권리 등의 제안도 많았다. 앞선 권리들이 감정의 주체로서 말한 권리들이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들은 관계 속에서 감정을 나눌 권리에 주목한 제안들이다. 피해자의 처지를 걱정하는 것이 ‘남 걱정’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지탄되기도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누군가 슬퍼하거나 아파할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드러난다. 또한 재난이나 아픔을 어떻게 대하고 관계해야 하는지 알 권리를 제안한 참여자도 있었다. 공감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의무인 것처럼 흔히 여겨지지만 어떤 사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감정을 느끼거나 공감하기 위한 여유, 시간 등을 강조한 내용들이 있다. 입시나 취업, 생계 등에 매몰되어 슬퍼할 시간과 여유가 한국사회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들

이다. 시간을 가질 권리라는 포괄적 제안도 있었다. 개개인이 감정을 느끼거나 타인에 공감하는 것이 삶 전반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것과 깊이 연결됨을 알 수 있다.

4. 피해자

1) 인정

피해자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상당수 제안되었다.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경향이나 피해자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는 경향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슬픔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걱정도 많았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나 그 외 사실로 모욕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들도 많았다. 피해 사실 자체가 낙인이 되기도 하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기는커녕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며,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로 피해가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는 현실을 보면서 문제를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에서 상당수의 희생자들이 학생이었는데 희생자들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불편함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다. “학생답지 않아도 괜찮을 권리, 순수하지 않아도 될 권리” 등이 말하는 것은 피해자가 있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 청소년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들은 대체로 청소년을 동료시민 주체로 인정하기보다 대상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접근이 반복될 때 청소년들이 권리 주체로 여겨지지 못하는 현실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피해자는 부당한 일을 당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이자 권리를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동료시민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가 권리주체로서의 피해자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은 피해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한 출발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권리의식을 갖게 한 듯하다.

2) 구체적 권리

피해자를 인정하는 것 외에 피해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다양한 권리를 제안한 내용들이 있다. 구체적 권리가 두루 제안되었고 기존의 인권규범에서 확립된 내용들과 유사하나 세월호 참사의 경험에서 드러난 문제들 위주로 제안되었다.

‘미수습자를 수습하여 예를 다할 권리’가 제안되었다. 기존의 인권규범 역시 실종자를 찾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자는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알 권리, 사건을 조사하고 참여할 권리 등이 피해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있었다.

배상에 대한 권리도 적지 않게 제안되었다. 배보상 문제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을 해치는 유언비어의 주된 소재였던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가 배상을 권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배상이 적극적인 권리로 제안된 것은 뜻깊다. 다만 실제로 배상에 관한 사회적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 구체적 내용은 제안자마다 다르기도 하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부터 이후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모자람 없이 존중받아야 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등 구체적인 지원이나 회복에 관한 권리들도 제안되었다. 심리적 치유를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들도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권리들은 포괄적 의미에서 배상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다. 배상을 금전적 보상만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짚어진 셈이다.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때에야말로 피해자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의미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짚는 제안도 있었다.

구체적 권리를 제안하면서 개별 권리의 내용보다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은 제안들도 많다. ‘육 먹지 않고’ 배상받을 권리와 같은 제안이 그것이다. 진실이 밝혀질 때서야 위로받고 치유될 수 있다는 내용 등 피해자의 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짚는 제안들도 있다. 한국사회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주장되어 오지 못했고, 특히 배보상이 권리가 아닌 모욕의 이유가 되는 현실에서, 풀뿌리토론은 피해자의 권리를 서로 알아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했다.

5. 진실과 정의

1) 진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나 사실을 알 권리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진실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진실을 알 수 없는 것 자체가 피해를 낳으며, 왜곡된 프레임에 시민들이 갇히게 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진실을 보상과 거래하려던 정부, 자료 제출도 거부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부의 모습을 비판하며 진실에 대한 권리를 제안했다.

풀뿌리토론 참여자들은 진실이 피해자를 포함해 우리를 위로하고 서로 믿게 하며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짚기도 했다. 알 권리가 강조되다 보니 ‘비밀 없는 사회’와 같은 제안 내용도 있었다. 표현상으로는 프라이버시와 대립될 수 있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공공의 것,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포함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 등에 대한 알 권리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진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와 같은 시스템 마련을 고민하는 참여자도 있었고, 우리의 집단적 힘이나 자신감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인권선언 추진단 중 다른 참사의 유가족이기도 한 참여자는 “유족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실’은 어떤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실들로 구성된 사건의 해석 또는 사건에 접근하는 관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언론

세월호 참사 당일 언론의 오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중대한 사건이다. 그 후로도 꾸준히 행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언론 보도만으로 주변 사람들

이 피해자나 함께 하는 시민들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하는 상황을 많이 접했다. 폭력적인 사람으로 매도되지 않을 권리와 같은 제안이 있었던 이유도 그것이다. 진실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언론을 꼭 집어서 제안한 내용들이 많아 따로 묶었다.

언론을 통해 진실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주장하거나 정확한 보도를 요구할 권리 등이 제안되었다. 근대 인권규범은 ‘언론의 자유’를 중심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언론의 기능을 지키는 데에 주목했다. 그러나 풀뿌리토론 참여자들은 언론의 보도를 수용하는 객체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언론을 가질 권리’ 등 알 권리의 주체로서 언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안했다. 언론은 진실이나 소통,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맥락에서 제안되었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거짓 보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언론에 대한 일정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높았다. 언론을 감시할 권리, 언론사 사장을 소환/평가/선출할 권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언론 관련 법제도 개혁 등이 그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거대권력 기구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춰볼 수 있다.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과, 시청 거부 등의 집단행동도 제안되었다.

3) 책임

‘책임’ ‘처벌’에 대한 제안들을 모았다. 책임을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안뿐만 아니라, 권력이 클수록 책임도 크게 져야 한다는 등 책임에 대한 주장이 많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꼬리자르기 식 재판결과만 나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들은 ‘사과 받을 권리’와 같은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사건에 대해 정부나 그 외 책임 주체들이 충분히 책임지지 않은 현실의 이면이다. 이럴 때에는 누구도 온전하고 진정한 사과를 받았다고 느낄 수 없다.

진실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마땅한 책임을 물을 권리가 짙어졌다는 점은 중요하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책임을 밝히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권리’의 중요 요소이며 정의를 위한 권리이기도 하다. 풀뿌리토론 중에는 처벌 자체만 얘기될 때 공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책임에 관한 제안들을 모

아보면 ‘불처벌’이 재발방지를 위한 변화를 가로막으며 다양한 권리 침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권리는 사법부를 통한 법적 처벌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시사한다. 책임을 묻기 위한 사회적 모색과 행동이 펼쳐질 필요가 있겠다. 한편, 풀뿌리토론의 첫 번째 질문에서 미안함, 책임감, 죄책감과 같은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세 번째 질문에서의 ‘책임’은 아주 일반적인 말이기보다 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의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안 중에는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걸 도와주지 않는 시민의 책임을 말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논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6. 표현과 행동

1) 애도

희생자를 기리는 사회적 행동으로서 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애도할 권리’ 등으로 제안되었다. 특히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닐 때의 경험과 연관지어 설명된 것이 많았다. 그 외에 애도 다양한 방법으로 추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었다. 애도할 권리는 주로 표현과 연관지어 설명된 것들이 많았으나 추모나 애도는 사회공동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들이 지적되었다. ‘추모’와 ‘애도’는 내용상 뚜렷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는 않았다.

2) 표현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말하고 소통할 권리, 들릴 권리 등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모였다. 사건 초기부터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들먹이며 자유로운 표현을 막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 제안 중에는 ‘표현의 자유’가 그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권리 이상임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

의견을 말하는 것은 누군가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누군가 말할 때 들려야 하고 들어야 한다거나 소통할 권리를 제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드러낸다. ‘공감을 조직할 권리’ 제안이 이런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을 권리이기도 한 것이다.

서툴러도 말할 수 있는 권리, 나이,성별,직급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이야기할 권리, 학교에서 마음 놓고 말할 권리 등의 제안에서는 일상에서의 위계 또는 권력관계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현실이 보인다. 소수자의 의견을 들어줄 권리와 같이 비차별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제안들이 있다. 한편, ‘중복’이라는 딱지가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어떤 사상이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의견이든 부당한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한국사회의 현실이 드러난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도 필요하다. 토론을 위해 시간,돈,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말할 수 있는 언어를 획득할 권리’와 같은 제안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현실이다 보니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대신 표현할 것들도 적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 권리이기도 함을 짚어볼 수 있다.

3) 혐오

혐오 받지 않을 권리, 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내용은 대부분 혐오 표현이나 행동을 규제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혐오가 주로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을 통해 쟁점화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전쟁과 혐오를 선동하는 표현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은 분명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미진하고 실질적인 제도도 갖추고 있지 못해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은 편이었다.

풀뿌리토론의 두 번째 질문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혐오세력’의 온-오프라인 행동의 심각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비하면 세 번째 질문에서 ‘혐오’를 특정한 내용의 권리 제안은 적었다. 혐오는 극단적인 표현이나 행동에 한정되지 않는 문제다. 세월호 참사의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여러 매체를 통해 ‘점잖은’ 말들로 참사 피해자들을 매도하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의 인정과 존중,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전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4) 행동

집회시위의 자유 등 모이고 행동할 권리가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대체로 평화적 집회시위를 보장받고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다. 탄압 받지 않고 집회 시위할 권리, 청와대 앞에서 집회할 권리, 캡사이신에 망가진 핸드폰 수리 요구할 권리, 꽃을 선물할 권리, 거리에 모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등 구체적인 표현이 많았다. 또한 ‘경찰도 원치 않는 집회 단속 안할 권리’ 등 집회시위 탄압이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는 점을 짚은 내용도 있었다.

집회나 시위가 대부분의 풀뿌리토론 참여자들이 함께 한 경험이자 직접적으로 탄압받았던 권리라는 측면에서 행동의 대부분은 집회시위를 통해 설명되지만 집회시위에 한정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았다.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행동할 권리, 가만히 있지 않을 권리, 장소를 점거할 권리, 끝까지 외칠 권리 등이 그것이다. 또한 다양한 행동이 평등한 투쟁으로 지지받을 권리라는 제안도 있었다.

5) 기억

온전하게 기억할 권리, 잊히지 않을 권리 등의 제안들이 있었다. 기억은 역사화될 권리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후세대에 전하기 위한 추모 공간 마련과 같은 제안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잊혀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 기억할 권리를 말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역사화하는 공통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7. 안전

앞서 기초에서 다룬 ‘안전’이 ‘돈보다 생명’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둔다면, 여기에 묶은 권리들

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요청되는 권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안된 내용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리들에 대한 제안이다. 안전과 관련된 정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대응에 필요한 매뉴얼이나 훈련, 교과과정에서의 안전 교육 등 개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알 권리에 해당한다.

둘째, 작업 중지권과 같이 위험을 인지했을 때 그 위험을 피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들이다. 위험으로부터 도피할 권리, 위험하다고 느낄 때 쉴 권리 등이 비슷한 제안이다.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현장에서의 권력관계상 위험을 알고도 피하거나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현장에서 안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 사고 발생시 책임자가 제대로 보고할 권리 등의 제안이 이런 점에 주목한 권리들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에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위험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존중,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위험을 감시하고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등의 제안이 있었다.

셋째,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위험을 줄여나가도록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다.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제도개선 등에 참여할 권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미 있는 접근법을 제시할 권리, 재난안전 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등이다. 기업살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개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를 요구하고 구조 받을 권리를 포함해 안전을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8. 민주주의

풀뿌리토론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진실이나 표현 등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와 쟁점이 있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대체로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에 대한 기대를 담은 말 정도로 키워드를 설정하고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 혹은 다른 사회에 대한 권리들을 모아 보았다. 이렇게 모인 권리들은 네 가지 두드러지는 분포를 보인다.

1) 교육

스스로 권리주체가 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다. 어릴 때부터 시민교육, 인권교육이라는 의무 교과과목을 통해 배울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정치나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 공동체 의식, 역사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 가정과 학교에서 성인들에게 인권교육을 하고, 받을 권리 등이 주요하게 이야기되었다.

권리를 알 권리가 많이 제기된 것은 세월호 참사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오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깨달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미처 몰랐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점은 모두가 참사를 함께 겪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2) 불복종

현재의 질서를 거부하고 불복종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들이다.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 양심에 따를 권리, 부당행위가 있을 시 즉각 저항할 권리, 불의에 저항할 권리, 자기 직업에 소명을 다할 권리, 외압 없이 자기 일할 권리 등이다.

위험을 만들어내는 구조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거나 못하는 문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력기구를 구성하는 구체적 개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함에 저항하기 시작할 때 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인되며, 이것은 그저 개인의 용기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점도 짚어진다.

3) 참여와 주권자의 권리

세월호 참사의 경험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했다.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현재의 권력기구들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다. 여기에 모인 권리들은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고려하는 제도들과 연관이 있다. 대통령을 소환할 권리, 검찰권 규제, 책임자를 소환할 권리,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인을 응징할 권리, 사법권에 대한 통제, 책임주체와 직접 만나고 소통할 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권리, 탄핵할 권리, 낙선운동 할 권리, 국회에서 연설할 권리, 국민의 일정 인원 이상이 서명한 요구사항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국민이 법을 제정할 권리 등이다.

4) 체제에 대한 권리

위 권리들로 묶기 어려운,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에 대한 상을 다양하게 그리고 현재의 체제가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담긴 내용들이다. 모든 사회적 배제를 배제해야 한다거나, 정의 사회에서 살 권리, 사회적 불평등을 깨뜨릴 권리,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나라를 물려줄 권리 등으로 표현된다. 경제적 문제에 주목한 내용들이 많았다. 돈이 없어도 잘 살 권리, 정의에 입각한 사회 분배, 노력한 만큼 잘 먹고 잘 살 권리, 쫓겨나지 않을 권리,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노동하지 않을 권리 등이 그것이다. 주어진 권리 너머의 권리를 창출할 권리 등 현재의 체제에 갇히지 않는 주권의 구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제안도 있다.

여기에 묶인 권리들은 사회 변혁에 대한 열망에 권리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상적이고 소망 수준에 머무른 듯도 보이지만 한국사회의 문제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참여자들의 인식이 드러나는 듯하다. 각각의 권리는 세월호 참사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다른 권리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선언이 개별 권리의 선언이자 동시에 다른 사회에 대한 집합적 권리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9. 총괄

1) 풀뿌리토론의 의의

1차 전체회의 이후 펼쳐진 풀뿌리토론은 4.16인권선언을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던 인권선언운동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와 내실을 갖추었다. 그동안 여러 선언운동이 있어 왔으나 이번과 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풀뿌리토론을 통해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선언을 만들어가는 경험은 알려진 바가 없다.

풀뿌리토론을 진행한 곳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마음과 생각을 깊이 나눌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이 가장 많았다. 동시에 토론이 다소 추상적이었거나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인권이라는 주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앞으로 풀뿌리토론을 계획 중인 곳도 있으나 추진단 중 상당수가 풀뿌리토론을 열지 못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다는 경우가 많았고, 토론 취지를 알리고 제안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특정 단체나 모임에 속하지 않은 경우 함께 토론할 사람이 주위에 많지 않아 어려웠다는 설문 응답도 있었다. 풀뿌리토론을 여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았음에도 많은 토론이 진행된 만큼 그 결과를 모두의 결과로 함께 살피며 소중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다.

풀뿌리토론이 펼쳐져온 과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사회의 방향을 밝히는 토론이라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장이 되기도 했다.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자는 목표를 두고 토론이 진행되었지만 인권을 매개로 토론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게 되었다. 풀뿌리토론 참여자들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제시하며 행동의 의지를 다졌다. 풀뿌리토론의 과정 자체를 조명하고 의미를 짚으면서 시민들이 권리의 주체이자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계기들이 확장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2) 풀뿌리토론의 내용

풀뿌리토론의 내용을 모아보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었으며 따로 또 함께 어떤 시간을 겪고 있는지 드러난다. 세월호 참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이 사회의 실체를 날 것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경험이었다.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나누며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인식해가는 과정이었으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변화에 대한 욕구와 참여하고 행동할 권리에 대한 자각과 다짐으로 이어졌다. 4.16인권선언은 이와 같은 현재적 조건을 반영하되 내일을 여는 실마리를 드러내는 계기일 것이다.

풀뿌리토론 결과는 당연히 세월호 참사와 직접 연관되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데 진실, 책임, 표현, 안전, 피해자 등에 관한 내용이 두드러진다. 진실이나 책임 관련해서는 비슷한 내용이 많이 제기되는 응집성이 보이며,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짙어지는 포괄성이 보인다. 피해자의 인정이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일반적으로 이미 확립된 내용들이 많이 제안되었지만 각자 자신의 말로 권리의 핵심을 짚은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다.

토론 참여자들이 제안한 내용은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 모두를 권리주체로 세우며, 한국사회 전체를 선언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들로 확장되기도 했다. 공감과 애도의 권리와 같은 내용이 두드러지는 한편, 민주주의나 체제를 넘어설 권리에 대한 고민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안전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권리에 한정되기보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 권리들이 두루 제안되었다. 토론 결과가 모이고 마주치고 가로지르면서 여러 권리의 내용들이 풍부해졌고 여러 권리들 간의 연관성과 상호의존성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풀뿌리토론이 세월호 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여러 권리의 쟁점에 대한 깊은 토론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조건이 되기도 했다. 막연하게 희망하거나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권리의 이름만 붙이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제기한 설문 응답도 있었다. 이런 아쉬움은 이후 4.16인권선언을 알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의 선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4.16인권선언은 인권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위한 실천으로 제안된 것이다. 인권의 힘은 권리주체들이 인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시작된다. 내용적 엄밀함보다는 토론 참여자들이 서로 권리의 자각을 이루고 복돋는 과정으로서 풀뿌리토론의

내용을 짚어보아야 한다. 제안된 권리들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를 깊이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4.16인권선언은 우리의 권리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실현하기 위해 더 단단하게 행동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3. 4.16연대 소개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인양위원회

- 세월호 인양 모니터링으로,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 감시와 촉구
- 팽목항으로 가는 기다림과 진실의 버스 운영
- 수습과 인양 촉구 시민참여 행동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한 월례 토론회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 공개 요구사업
- 특조위, 해수부, 국회 활동 모니터 등 4.16진실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시민감시 활동

안전사회위원회

- 특조위 안전소위원회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판, 견인
- 강력한 처벌로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공공안전, 대중교통의 안전, 노동현장의 안전 등에 대한 시민 권리 찾기 대중행동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 4.16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전국 풀뿌리토론 지원 및 선언인단 모집
- 세월호 참사 4.16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인권선언 연속강좌, 간담회, 인권교육 및 기고활동

416가족분향소 세월광장운영위원회

- 416가족분향소 운영
- 광화문 세월호 가족 농성장 운영 및 문화제, 주요 행사 총괄

416공감위원회

-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고, 변화를 위한 공감대를 나누는 미디어 및 문화예술 등 콘텐츠 창작
- 화인 프로젝트 2015



4.16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4.16가족입니다.
함께 하면 힘이 됩니다.
잊지 않겠다는 실천의 마음으로 4.16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회원이 되시면

- ✓ 정기회비로 4.16연대를 지키고, 피해가족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 4.16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관련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뉴스레터와 월간 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 4.16 교양강좌프로그램, 각종 위원회와 모임, 자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안내

_4.16연대 홈페이지 <http://416act.net/cms> 에 접속 후 절차에 따라 회원에 가입하세요
_현장 가입처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상황실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 416network@gmail.com

☎ 02.2285.0416

☎ 02.722.0416

🐦 twitter.com/416act

📘 facebook.com/416act.net